



김민아 기자

반대한다 노동개악

관련 기사 16면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8~10면

올해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가?

4~6면

문재인 정부,
개악은 보증수표
개혁은 부도수표

3면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13면

문재인과
아베의 만남

2면

칠레, 홍콩,
카탈루냐, 레바논...

세계적 위기는
세계적 반란을
촉진하고 있다

11면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책 파산 12면
- 11월 20일 철도 파업 예고 14면
- 고(故) 김용균 1주기 15면
-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15면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한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 정부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조만간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방일 중이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문희상은 11월 4일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에게서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의 제정을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60억 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이곳의 돈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기만적인 안조차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알려졌다.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말이다. 즉, 법적 책임(배상)은커녕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



예고된 후퇴 11월 4일 아세안 정상회의 회담장에서 아베와 악수하는 문재인

기 싫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희상 안은 여러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거리두기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 대일 특사였던 문희상에게서 나온 안이어서, 정부가 여론을 떠보는 게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문재인은 아베와의 만남에서도 '1+1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보다도 더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정원장 서훈 등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복구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솔솔 흘리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항일 투사 행세를 하던 정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 여당 내부에서 한일 갈등의 '출구전략'을 찾는 기색이 역력하다.

역경계도 <조선일보>가 "이순신" 찾

고 '죽창가' 부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11월 5일자 사설) 하고 비꼬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행보는 국내에서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있다.

독립적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타협 행보는 진보·좌파 진영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데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준다.

지난 여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로 곤혹스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즉, 일관되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고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게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실천에서는 군사훈련을 포함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맹 구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협조했다.(관련 기사: 7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11월 5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은 한일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연기'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는 안을 내놔다고 한다. 다음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결정대로 갈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미국이 집요하게 압박하고 정부 자신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다. 설령 이번에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도 한미일 협력 문제는 또다시 제기될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좌파 진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되고, 독립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수사 방해까지 모두 수사 대상

김승주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경이 한 일은 구조보다는 구조 '방해'에 가까웠다.

10월 31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이하 사참위) 발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희생자(단원고 故 임경빈 군)를 바다에서 건져냈다. 병원은 헬기로 단 20분 거리였고, 즉시 헬기를 이용했다면 임 군을 살릴 최후의 가능성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은 헬기에 임 군을 태우지 않았다. 현장의 헬기들이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의전에 쓰였기 때문이다. 해경 최고 책임자들은 현장에 한 참이나 뒤늦게 도착해 뭐라도 하는 척 '쇼'를 하고 있었다.

원격 진료 중이던 병원 측이 긴급 후송하라고 요구했음에도 해경은 이를 무시했고, 의사의 동의도 없이 임 군을 '시신'으로 규정했다. 결국 임 군은 4시간 넘게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겨지다 숨졌다.

임 군의 사망은 해경의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국가의 구조 외면과 무

능이라는 참사의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문제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단 1명(123정장 김경일)뿐이라는 사실이다.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가 물러나고 '촛불 계승' 운운하던 문재인이 집권한 지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말이다.

참사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해경 내 최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정부나 유관 기관 등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가 고소·고발한 미처벌 책임자는 120명이 넘는다.

가령 임 군 대신 헬기를 차지했던 해경청장 김석균은 침몰 당시 현장 대원들에게 승객들이 배 안에 가만히 있도록 지시하게 한 장본인이다. 구조 상황을 과장한 거짓 기자회견도 이 자의 작품이다. 그런 작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 중부대학교 대학원 현직 교수로 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처벌 못 해

폭로 일주일 뒤인 11월 6일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재수사

를 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전 문재인 정부는 같은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단칼에 거절했었다.

조국 사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 검찰이 참사 직후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핵심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1기 세월호 특조위 강제 폐쇄의 장본인이다. 황교안은 김기춘, 조윤선 등과 달리 세월호 수사 방해전으로 기소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김기춘, 조윤선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황교안 때문인지 <조선일보>는 11월 7일 사설에서 검찰의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총견들(검찰)이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 행태는 친문이나 우파나 똑같다.

하지만 세월호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적폐 청산 목록 중 하나이다. 오히려 그동안 문재인이 집권 전 약속을 뒤집고 대중의 특별 수사 요구를 거부해

온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 야당과 정쟁을 벌이면서도 노동계약 등 기업주의 요구 앞에서는 협력 파트너였다. 그 과정에서 적폐 청산은 늘 응두사미 되기 일쑤였다. 세월호 수사와 처벌 방기도 그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세월호를 우파 견제용으로만 사용하다 서둘러 덮기를 반복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수사가 잘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재수사에서 당시 해경과 해양수산부의 책임자들, 수사를 방기한 검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모욕한 기무사(현 안보지원사) 등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국정원·제주 해군기지와의 연관성 수사해야

무엇보다 세월호 출생부터 침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가 필수적이다. 침몰 원인과 직결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적재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에 시시콜콜 관여하고 청해진해운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한 일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개

혁위원회는 '셀프 면죄부'를 발부했다. "국정원의 세월호 소유설 및 특수관계설, 유가족 등 관련 인물 사찰설,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설,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설 등의 의혹"을 뒷받침할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이에 힘을 실어 줬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국정원이라는 암흑의 '성역'을 감싸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활용 가치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에 협력하려고 제주 해군기지를 만든 '원죄'가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월호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를 회피하면서 운동은 전보다 참가자들의 지지를 잃고 약화돼 왔다. 지금의 수사도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지 말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대중의 지지와 정부에 대한 압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올해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운영위원

올해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

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규직화 투쟁, 한화호텔 파업 등이 이때 벌어졌다.

경사노위 불참 이후 상반기:

왜 운동은 할 수도 있었을 전진을 하지 못했나?

이 시기에 노동운동은 중요한 정치적 소득을 얻었다. 4·3 재보선에서 정의당의 당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4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취소(4월 17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이 더 전진할 수도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5월 말경에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이후 반토막 났던 지지율을 점차 회복하면서 주도권을 다시 강화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소득에 대한 우파 측의 반동이 강화되고(그들 집회 규모의 성장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한국당이 4월 말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중도좌파(이하 진보) 측에서는 우파에 맞서 진보계와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됐다. 이러한 소박한 민중주의적(진보 포퓰리즘) 사고는 여당의 “패스트트랙”(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한 진보계의 낙관과 관계있었다.

더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회대개혁” 추진의 일면 협력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정면 도전하기를 꺼렸다. 그래서 김명환 집행부는 메이데이 행사를 전국집중 서울집회가 아니라 권역별 분산집회로 치렀다. 분노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청와대쪽 행진이 문재인 대통령(그러잖아도 우파한테서 공격받고 있는)에게 부담을 줄까 봐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러한 타협주의적 전망에 따라 민주노총에 교섭전략특위를 설치하고 본인이 특위장을 맡으려 했다.

5월 24일 중앙위원회에 내려던 이 계획은 좌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5월 21일에 발표된 좌파 공동성명의 제목은 “교섭을 추진이 아니라 총파

업 실질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였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는 대화·교섭 중심 계획이 거듭 자초됐는데도 ‘사회적 대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좌고우면하면서, 투쟁을 이끌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노총 집행부의 예상과 달리 여야의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물건너”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마비돼 있는 동안에도 탄력근로제 제도 기간 연장을 통해 이미 주52시간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또 강조했다.(그 결과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역대 최저급 인상 수준인 사용자 측 안이 가결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5월 말경 계급 세력균형은 다시 정부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6월 10일 ILO 총회까지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기대도 빛나갔다.

심지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 민주노총 상근간부들에 대한 탄압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공격에 실질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조차 마한가지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보석 석방을 택했는데, 수배되거나 구속되면 정부와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이런 소심함은 비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착각 때문만은 아니고,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경제 회복에 협조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도 작용했다.

이는 구조조정 저지에 그들이 큰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또, 최근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조직(군산시지부)이 참여한 것도 이를 보여 준다.

상반기 내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진보정치 세력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바람에 민주당 왼쪽에서 진정한 진보적 대안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좌파 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불만을 확인하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큰 불신을 보여 줬다. 불참 결정에 좌파들의 불참 운동이 기여한 바가 컸다

한일 갈등 불거지다:

노동계 지도부들의 민족주의적 대응이 계급 대립을 흐리다

7월은 전달부터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됐다. 6월 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파업이 있었고, 7월 1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고, 7월 3~5일 학교비정규직의 사흘 파업이 있었다.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6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요한 집단으로, 노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가 이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발표돼 본격적인 한일 갈등이 시작됐다. 그러자 이것이 다른 모든 쟁점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친일이나 반일이나 하는 민족적 진영논리가 득세하고 노동자 투쟁은 급속히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 상황에서 애석하게도 진보계와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적으로 대응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일부 산하 노조 집행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반일·불매 운동을 지지했다. 국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결’에 힘을 실자는 것이었다.

한국이 마치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이거나 아니면 재식민지화 위험에라도 처한 양하는 이런 착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국가의 위상이 변해 현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됐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일본에 맞서 자국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반제 자주운동’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 편을 드는 것일 뿐이다.

노동계 3대 조직인 민주노총과 정의당과 민중당의 지도부들은 모두 자유한국당을 친일 적폐세력으로 규탄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문재인 정부는 거의 비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선택(자주, 평화체제)을 하도록 “견인, 강제”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일본 대응에 사실상 협조했다. 정의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 참가했다. 자민통계는 드러내놓고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비판 삼가기

그리하여 노정 간 세력관계가 더욱 문재인 정부에 유리해지고 노동자 투쟁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7월에도 노동자 투쟁은 지속되고 있었고, 최저임금 사용자 측 안 가결 등 정부의 노동개혁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노동계급 투쟁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등 노동계 주요 조직들이 정부와 협조하는 것은 심각한 과오였다. 일본과 그 배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공세를 폭로하면서도 노동계급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도, 민족주의적으로 대처해 계급 대립을 흐린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단결 기치를 내세워 노동자 희생을 정당화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이겨 내야 한다면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산

업 안전 규제를 풀고,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기 전부터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었다(7월 3일 발표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그렇지 않아도 하려던 기업 지원을 한일 갈등을 핑계로 정당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를 추수해 현대차노조 집행부(노동전선 소속인 민투위가 배출한 하부영 집행부)는 파업을 유보했다.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계 주요 조직들은 ‘재벌 중심 대외의 존형 경제’ 탈피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발목 잡히기 십상인 노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정세해설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핵심품목 100개를 선정해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여 5년 안에 자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조차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민주노총 정세해설서 2019-09)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0일과 15일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해 이 분야 기술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곧 재벌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9월 3일 민주노총 임원들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만남 요청을 수락한 것은 위기에 몰린 문재인 정부에 숨 쉴 틈을 준 셈이었다

조국 임면 정국:

계급 대물림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에 응답하지 못하다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사퇴 문제가 한국 정치를 압도한 쟁점이 됐다. 예고되던 일본의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마침내 8월 28일 실행됐는데도, 조국 사태에 가려질 정도였다. 조국 임명 반대나 지지냐를 놓고 이번에는 여야 자본주의 양대 정당 간 진영논리가 재연됐다.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는 특권을 행사해 온 인물을 개혁가로 내세운 것임이 드러났다. 그러자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실망과 분노가 분출했다. 그러자 정부·여당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의 논리로 조국을 방어하면서, 조국 임명 반대자들은 곧 보수 또는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몰아세웠다.

조국 사태가 계급 불평등 문제였는데도 안타깝게도 노동계 대표 조직들(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은 사이비 진영논리 안에 자신을 옥여넣기를 택했다. 노동자들이 정부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편을 들으로써 노동자들의 적인 정부와 한 편이 되는 길을 또다시 선택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민주노총 정세해설서는 “일본 무역 제재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친일적폐세력의 총결사전”이 드러났으면서, “친일적폐세력의 온전한 청산”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이와 달리 문재인 정

치적 위기를 투쟁 기회로 이용했다면 일정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8월 30일) 정부는 몇몇 투쟁에 양보해 불만과 저항의 확대를 일단 차단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쟁취한 것이다. 거기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정규직의 연대, 그리고 정부의 위기가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뒀다.(설사 이 노동자들 자신이 정부의 위기를 의식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주변화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향은 이와 달랐다. 9월 3일 민주노총 임원들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났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정부에 개혁 색깔을 해 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벌게 해 주는 셈이었다. 오간 말보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악수하고 함께 웃는 행위가 더 중요한 만남이었다. 그럼에도 오간 말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정 협의 틀” 마련을 촉구하고 김상조가 그것을 약속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정 협의 틀 마련을 약속 받고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숨 쉴 틈을 제공한 것이다.

민주노총과의 만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 논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 몇새 만에 조국을 법무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결국 조국은 임명 한 달여 만에 사퇴했다. 정부 편에 서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 결과, 노동계 대표 조직들은 이른바 ‘조국 대전’이 치러지는 동안 정말로 존재감 없이 주변화됐고 지금은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국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 혼한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두 달 내내 조국과 정부·여당 비판을 일일 삼간 것이다. 정의당도 한국당을 강경하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 비판은 삼가면서 사실상 정부·여당을 지지했다. 민중당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민주당 왼쪽의 진정한 진보적 대안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진보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다.

노동계 대표 조직들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 지지를 확대할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과오였다. 아무리 ‘노오력’ 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격차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정치 경험 없는 청년들을 오른쪽으로 떠밀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처럼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집단이 적으로 변하면 장차 노동운동은 이런 실수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경제 위기 시기의 정치 격변에 잘못 대처하면 이런 위험이 증대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의당, 민중당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의 과오는 특권 계급의 일부이자 그 옹호자인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면서 개혁을 조금씩 얻어 내는 것이 진보적 전진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거의 목을 매고 있고, 민주노총은 노사·노동 교섭의 안정화를 통한 조합원 조건 개선을 기대할 것이다. 모두 이를 통해 연립 정부를 향한 발판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주의 전략(계급을 초월한 국민 연합)은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세력과의 동맹에 아래로부터의 노동 운동을 묶어 뭉으로써 진보적 개혁의 진정한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난점이 있다. 특히 지금 같은 장기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고는 부분적 개혁조차 쟁취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 동력인 기층

운동을 활성화시키기는커녕 계급투쟁과 계급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민중주의 전략의 핵심적 난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제하면 우파에게 득이 된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사회대개혁에 나서겠다면서,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라는 기치를 걸었다. 이 말은 노동조합의 협소한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말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김명환 집행부가 패스트트랙, 한일 갈등,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에서 취한 입장과 그 결과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민중주의적인 사회대개혁 노선이 노동조합 부문주의·경제주의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조국 사태 동안 노동자 운동은 더욱 주변화됐다. 그리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던 문재인은 위기 탈출을 위해 지금 다시 친기업 정책 추진에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개악 친기업 문재인:

불법일지라도 정치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조국 사퇴 직전 즈음인 10월 초순부터 부쩍 기업주 친화성을 보여 주려고 발벗고 나섰다. 단지 정치 위기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 때문에도 문재인은 친기업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했는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잘 알 수 있다. “기업에 부담이 갈 정책”인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흡수능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에 늘어날 재정 지출과 관련해 “투자에 비중을 뒀다”고 했다. 내년 산업 분야 재정지원 예산은 올해에 비해 27퍼센트 늘어나고, 연구개발 지원은 17퍼센트,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13퍼센트 늘어났다. 반면 복지 분야 증가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친기업 정책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10월 21일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은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둘은 다른 문제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 즉 사회적 권력을 얻기 위한 주장과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 위기가 조성되기 쉽고, 이것이 어떤 요인들과 맞물리면 거대한 투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이런 사례를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유가 인상이 촉발한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에코파르 시위,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한 칠레 항쟁 등등이 그렇다.

지금 같은 시기에 노동조합 쟁점들에만 관여한다면 효과적 좌파 구실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공격을 만만찮게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연말 연초 국면에서도 올해 내내 재미를 본 방법을 재활용하려 할 것이다. 즉, 패스트트랙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노동운동을 붙잡아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최근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여야 갈등 덕분에 정부의 실수가 가려지는 형국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복은 없지만 야당 복은 있다”고 했는데, 일리가 없지 않다.

패스트트랙

그러나 올해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의 전진에 여러 걸림돌들이 있다. 주로 개혁주의에서 비롯하는 이런 문제들은 거듭 재연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윤을 실질적으로 공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노동조건을 조금 개선하려는 투쟁조차 지배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다. 이런 조건 하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체제가 제공할 개혁이 별로 없다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구조조정과 임금, 일자리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을 악화시킬 노동개악에 과감히 저항해야 한다

문제 등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가령 그들은 구조조정 반대에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같은 “우리 사회의 난제”를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고 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노조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노조 집행부가 미래차 생산에 따른 인원 감축을 부분 수용한 것은 이런 난점을 잘 보여 준다.

노조 지도자들의 다수는 독일의 산업 4.0 논의에 참여한 독일 노동조합의 노동 4.0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최근 독일 제조업이 유로존 경기하강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임금 문제는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꺼리고 피하는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들의 임금 비용 부담을 줄여 주려고 추진하는 직무급제에 대해서 노동조합 지도부의 입장은 모호하다. 다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논의해 수용할 수 있다고 내심 생각한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지 않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는다. 노조 활동가들은 노조

지도부가 직무급제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정규직 임금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그렇다.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조금 커지자 사용자들이 총반격을 해서 올해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케 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올해 만만찮게 저항을 조직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10퍼센트)은 노무현 정부 때(10.6퍼센트)보다 낮다.

개혁주의

또, 노동계 대표 조직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민중주의 전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법 논의가 지연되기를 바

라면서 총선을 기다리거나, 선거제도 개선에 계속 목을 맬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계 지도부들이 운동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 우파가 득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2010년 희망버스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그 연장선에서 2011년 박원순이 오세훈을 제치고 시장에 당선한 이후의 상황이 그랬다. 개혁주의자들은 운동을 자제시키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선거를 기다렸는데 결국 2012년 총선에서 우파가 득을 봤다.

물론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면서 커진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박지원이 말한 “야당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정의당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추천 책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룬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6)
임금격차 증대의 본질을 밝히고,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커진다’는 냉소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얇은 분량(130여 쪽)임에도 알차고 간단명료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탄 소책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9)
4차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를 위기의 늪에서 꺼내 줄까? 인공지능 로봇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계급을 약화시킨 건 않을까?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관련 논의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들춰 낸다.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간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래서 전임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도 일본을 중심으로 역내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해 왔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일본·호주·인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역내 동맹국들을 이에 편입시키려 한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이 "기여"하라고 압박한다.

남중국해

집권 초반 해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다분히 중국 등을 의식한 것일 테다.

그러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11월 2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차관보급 협의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설명서를 내놓았다. 대부분이 경제 협력 방안이지만, 거기에도 중국 견제를 위한 코드는 있다. 예컨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 지원에 관한 논의는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견제하는 것과 관련 있다.

11월 6일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이스 크라크는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을 경제 영역에서 견제할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화웨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화웨이를 삼성 등 다른 기업으로 대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라고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데서 타협할 공간이 크다. 11월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은 "남중국해가 비군사화되고, 자유로운 항행과 상공비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비난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펼쳐 온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 남중국해와 호르무즈해협 등지의 안보에 한국이 기여하라고 — 파병, 재정 지원, 군사시설 제공 등 —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미국 유사시'도 포함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만난 문재인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 제안이 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훗날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이를 "미국 유사시"로 간주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 자산을 투입하거나 한국을 증원 전력의 중간 기지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무력 충돌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방위비분담금 5배로 인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강력하게 내미는 요구 중 하나다. 이미 한국은 매년 1조 원 넘는 지원금을 미국에 주고 있다. 이 밖에 기지사용료 면제,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을 합치면 전체 지원 규모는 공식 지원금보다 몇 배 더 많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금을 5배로 인상해 매년 50억 달러가량을 내라고 촉구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뿐 아니라 심지어 호르무즈해협을 비롯한 한반도 바깥의 미군 활동 지원도 포함돼 있다. 미국 군대가 수행하는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보장 활동으로 한국이 수혜를 입는 만큼 돈을 내라는 식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국에 주둔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주한미군을 배치했다. 중국과 아주 가까운 평택에 주한미군이 밀집돼 있다는 점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무엇 인지를 보여 준다. 민중공동행동 등의 주장대로 방위비분담금 같은 미군 지원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자국의 패권 유지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생떼에 문제

인 정부는 타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요구 수준이 너무 터무니없어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폭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인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협정 연장을 한국에 집요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 같은 한·일 군사 협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가 계기가 된 한일 갈등에서 사실상 일본을 두둔한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에 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갈등에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일단 지소미아 협정 자체는 유지하자는 대안을 한·일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주요 진보 단체와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항일' 노선을 지지했고 이에 사실상 협력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촉구 속에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관련 기사: 2면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근 국방장관 정경두, 국정원장 서훈 등이 잇달아 지소미아 연장을 시사하는 말을 꺼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 유지 의견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설사 이번엔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향후 재추진될 공간이 있는 것이다.

부메랑

정육식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 제시할 요구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사드 정식 배치(현재는 임시 배치 상태),



11월 6일 민중공동행동 등의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방한 규탄 기자회견

신형 전술핵 한국 재배치, 미국의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국 배치 등등.

미국 제국주의의 지원 확대는 한반도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안 그래도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불안정이 점증하는 아시아에서 그 불안정을 더 악화하는 조처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진보진영 일각은 문재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사이에서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를 평화 쪽으로 견인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 체제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세력이며, 그 이해관계를 나름의 방식으로 잘 관찰하려 애쓴다.

문재인 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의식하게 됐으나, 여전히 한미동맹 노선 자체는 굳건하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스스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우리 안보의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했다.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에서 한국 국가의 지위를 높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즉,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끌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국익(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제국주의에 협력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따라서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지소미아 파기 등을 요구하고 반제국주의 운동 건설을 도모해야 한다.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SNS 시대에도 혁명적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김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3일에 김버가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통역자와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맑시즘 2019'에 대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연대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주제는 혁명가들의 매우 중요한 과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혁명가들의 주장을 사회의 훨씬 더 광범한 층에 전파하는 것 말입니다.

혁명적 단체는 원칙, 경험, 운동의 과제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라 함은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적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 조직의 중요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할 필요성 같은 기본적인 정치 사상 말이죠.

경험이라 함은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있었던 노동계급 투쟁과 국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 모두를 뜻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위대한 혁명 당시 있었던 일, 1987년 한국에서 대중 파업 당시 있었던 일, 1994년 남아프리카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붕괴시킬 때 있었던 일 등이 그런 것입니다.

운동의 과제라 함은, '이 다음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면한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할 바는,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뉴스와 정보를 얻는 시대에도 혁명적 신문은 정말이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동자 연대〉라든가 〈소셜리스트 워커〉 같은 [종이 신문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노동자 연대〉보다 발행은 약간 작지만 지면 수는 더 많다는 점을 덧붙여야겠군요. [좌중 웃음]

조직, 교육, 선동

종이 신문은 다음 세 가지 점이 핵심입니다. ① 조직가로서의 신문, ② 교육자로서의 신문, ③ 선동가로서의 신문. 이런 점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소셜리스트 워커〉 최신호[2667호]를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7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맞서 9월 20일에 영국에서 동맹휴업과 노동자 파업을 하려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중 하나는 제목이 '9월 20일에 모두 거리로'입니다. 이 정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가로서의 면모입니다. 14면에서는 50년 전에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북아일랜드 공화파의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북아일랜드에 군대를 투입했던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선동가로서의 면모는 1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헤드라인이 '보수당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이고, 여기 철창에 갇힌 사람이 [보수당 소속 현 총리] 보리스 존슨입니다. 덧붙이자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한 것[박근혜 퇴진 처럼] 영국의 우리들이 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중 웃음] 그럼에도 이것은 선동적 요구인 거죠.

지금은 제가 이 [혁명적] 신문의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초의 혁명적 신문 편집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50년에 걸친 혁명적 신문의 역사를 짧게 훑어 보며, 오늘날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꽤나 흥미진진한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1850년대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별로 없고 영국 제국주의에 관해 사과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세계 최초의 노동자 운동이 영국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북극성〉이라는 최초의 이 신문은 차티스트 운동의 신문이었습니다.(자료2) 〈북극성〉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초의 총파업을 이끌었고,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의 요구들을 선동했습니다.

〈북극성〉지면을 보신 여러분의 첫 인상은 '정말 파분하겠단'일 것입니다. [좌중 웃음] 이렇게 생긴 [활자만 뿔뿔하고 사진 등은 없는] 신문을 읽는 것이 상상이 되시냐는 겁니다. [웃음]

하지만 이것은 [지면이 이런 모양인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북극성〉 창간 이전인 1840년대에 이미 신문에 사진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북극성〉지면이 이런 모습인 것은 당시 영국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노동계급의 문맹률이 높았기에, 지역에 따라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 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편마차로 〈북극성〉이 배달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신문을 꺼내 들고는 동료 노동자들과 주변 청중들에게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낭독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성〉은 자연스럽게 조직자의 구실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청중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신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북극성〉은 선동가의 구실도 하게 됐습니다. 신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앞에 앉습니다. 기사 중 하나는 제목이 '9월 20일에 모두 거리로'입니다. 이 정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조직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차티스트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어니스트 존스는 신문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운동이든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의사 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운동의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유럽신문 판매는 체제의 압력에서 혁명적 주장을 지키는 방법이고, 독자가 신문에 더 큰 유대를 갖도록 한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대회

호소하고, 촉구하고, [운동의 대의를] 옹호하고, [운동의 구성원들이] 서로 접촉하는 매체다. 그런 매체는 단결의 보루이며, 전진의 기지이며, 논쟁의 도구다. 그런 매체가 있어야 운동은 자신감을 유지하고, 상이한 당파들을 한데 모으며, 운동 내 여러 요소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다.'

레닌

반 세기쯤 건너뛰어 러시아 혁명가들의 신문 〈이스크라〉가 있습니다. '이스크라'는 불꽃, 들불을 일으킬 불씨라는 뜻으로, 1900년에 창간된 레닌의 첫 신문인 제호였습니다. 레닌은 차티스트 운동이 품고 있던 [신문에 대한] 생각을 가져와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레닌은 신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은 단지 집단적 선전·선동의 수단일 뿐 아니라, 조직 수단이기도 하다. 신문을 비계, 즉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건물 주위에 세운 팔판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신문을 중심으로 건설된 조직은, 혁명 운동의 극심한 침체기는 전국적 무장 봉기를 준비하는 시기든 당의 위상과 연속성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과업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핵심은, 사회주의자들을 공방의 과제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신문은 그저 소용 창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는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가들은 〈이스크라〉를 1905년 혁명기를 거쳐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 계속 발행했습니다.

그 후 레닌은 〈프라우다〉라는 새로운 제호로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프라우다'는 러시아어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프라우다〉는 1917년 러시아 혁명기에 핵심적 구실을 했습니다. '프라우다'는 매우 대중적인 신문이 됐지만 이는 한참 나중의 일이고, 대부분의 발행 기간 동안 〈프라우다〉 판매 부수는 볼셰비키 당원 수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훗날 [1917년 혁명을 거치면서] 대중적인 신문으로 성장했죠.

그로부터 50년을 또 건너뛰어, 이번이 소개할 신문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신문은 아닙니다. 미국 흑인들의 혁명적 조직인 흑표병당의 신문입니다. 신문 창간호의 헤드라인은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흑인 살해죠. 덴절 다윈이라는 흑인의 어머니가 경찰이 아들을 죽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조금 거칠긴 하지만 오늘날 신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라면 이 활자 크기를 헤드라인과 똑같이 했습니니다만, 이거야 사소한 문제죠. 신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경찰이 덴절을 죽였다. 그 러니 이 신문을 읽어라.'

흑표병당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데이비드 윌리어드는 신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간행물을 갖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간행물은 흑인들을 차별하는 국가에 맞서 흑인들의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부의 거짓말을 반박

하고, 진실을 전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칼과 함께 펜도 쓰기 위한 수단이다.'

윌리어드가 쓴 칼과 펜의 비유는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흑표병당은 [경찰 폭력에 맞서] 총으로 무장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어드가 칼 [무기]뿐 아니라 펜도 [투쟁에]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계급투쟁을 반영

이제 1850년대부터 2019년에 이르는 [혁명적 신문의]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소개할 신문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신문은 아닙니다. 미국 흑인들의 혁명적 조직인 흑표병당의 신문입니다.(자료1)

첫째는 1968년에 창간한 〈소셜리스트 워커〉의 초창기 호 중 하나입니다. 1968년에 신문을 창간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968년에 프랑스에서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총파업이 벌어졌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구정 공세를 감행해 미국에 쓰디쓴 패배를 안겼고,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1면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헤드라인 제목은 '프랑스가 영국 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입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다면 영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신문은 4면짜리였는데 상단 기사 한 명이 모든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죠.



자료2

〈북극성〉, 차티스트 운동의 신문

운동이 점점 부상하면서 지면 수도 늘고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이 둘째 사진은 같은 해에 나온 신문의 1면인데, 전체 8면짜리 신문이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노동자 파업과 작업장 점거가 영국을 휩쓸고, 대규모 광원 파업으로 정부가 퇴진했습니다. 이 셋째 사진은 4만 부가 팔려 당시에 가장 많이 팔린 호의 신문입니다. 영국 노동자 투쟁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팔린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영국에서 투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투쟁 상승세에 맞춰 〈소셜리스트 워커〉는 재창간을 했고, 독자층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때 발행된] 이 넷째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거리 가판에서 판매했던 신문이기도 합니다. 당시는 1970년대 영국 투쟁이 정점을 찍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SWP에 입당한 직후인 1977년에 영국의 계급투쟁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신문의 형태를 이전보다 훨씬 더 긴 기사를 주로 실는 방식으로 바꿔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파업하자', '작업장에서 투쟁하자', '정부를 퇴진시키자' 같은 것[선동이 아니라, 더는 파업이 연전연승하지 않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역사와 이론을 제시해야]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였던 1999년 말에 시작된 반 자본주의의 항쟁과, 2001·2003·2004년 이라크 전쟁 반 대 운동으로 대중 운동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소셜리스트 워커〉는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다섯째 사진이 바로 대중 운동의 시대에 발행된 신문입니다. 두드러진 변화는 컬러 사진을 꾸준히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컬러 사진을 몇 번 실긴 했지만 계속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신문은 4면짜리였는데 상단 기사 한 명이 모든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죠.

나는 인쇄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영국에서 더는 어떤 인쇄소도 큰 판형으로 신문을 인쇄하지 않아서, [지금 〈소셜리스트 워커〉처럼] 작은 판형으로만 인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역사를 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 하는] 시시콜콜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계급투쟁의 시기에 따라 신문이 다른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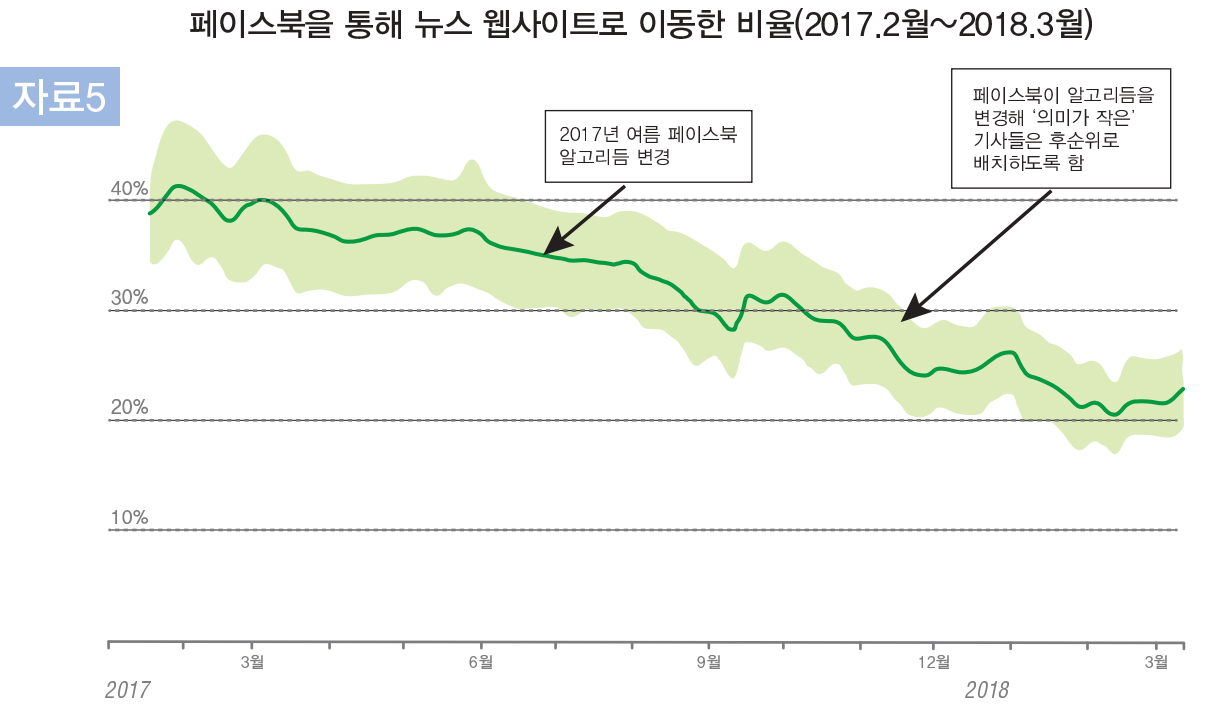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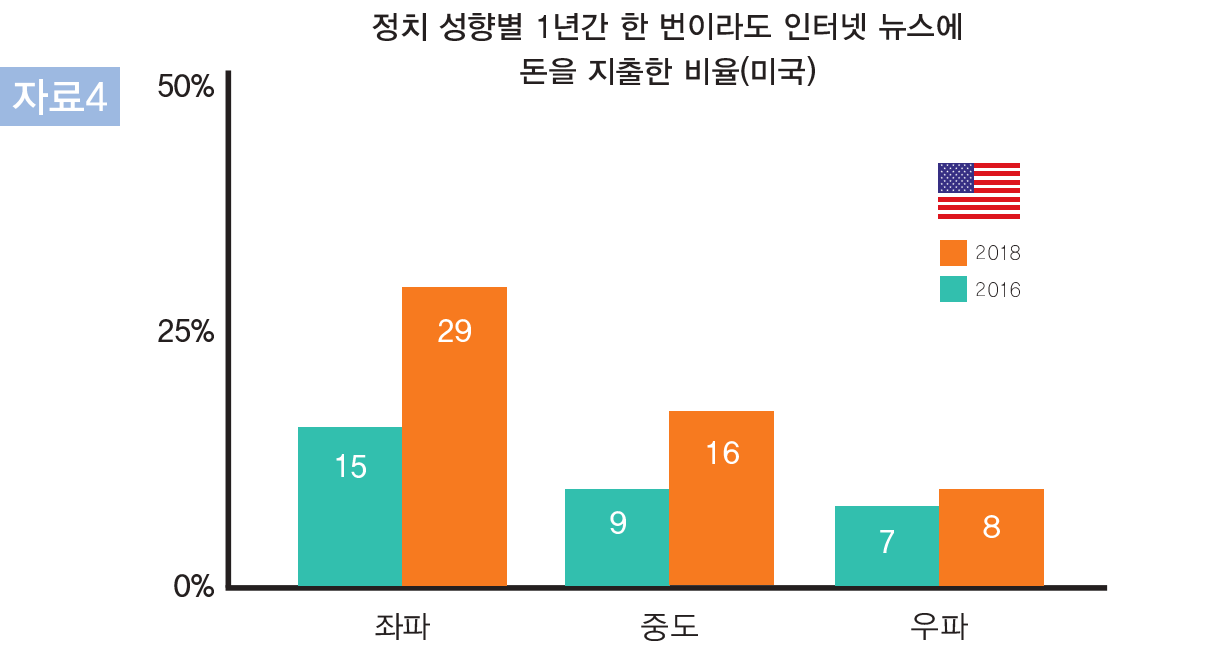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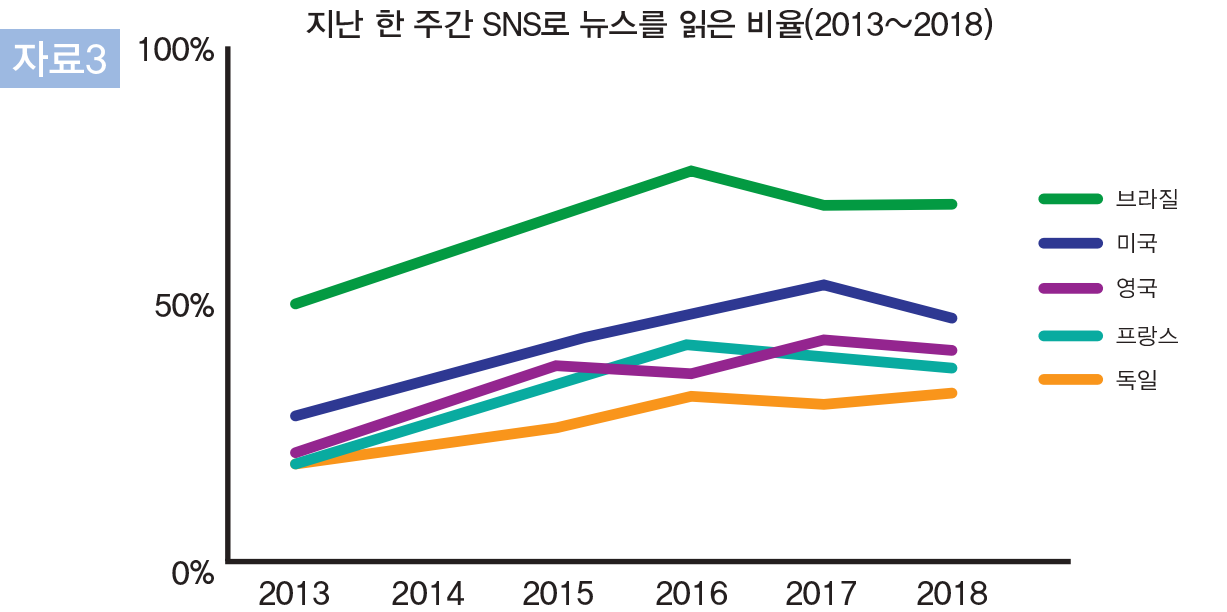
인터넷

이런 [신문의] 역사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다 있는걸? [그러니 종이 신문은 의미가 없어]'

사실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어떤 경로로 접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은 반면, 종이 신문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5년 사이에 약 60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2016~2019년 한국의 통계를 보면,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높아 80퍼센트를 넘는 반면, 종이 신문은 비교적 낮아 약 20퍼센트 정도도 줄었습니다.

자본가들에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종이 신문은 돈이 되지 않으니, 이제 수익을 내려면 인터넷에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SNS)로 뉴스를 읽는 비율도 높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SNS를 [뉴스 구독 목적으로 이용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한 통계를 보면 1위는 제게도 익숙한 유튜브이고 2위는 제



가 알지 못하는 카카오톡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도 그 뒤를 잇습니다. 1위인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비중이 38퍼센트인데, 이는 SNS를 아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고 영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SNS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특별한

명함을 언제나 휴대하고 참석하는 모임에서 늘 사용합니다. 저희 당원들도 그 명함을 신문 가판과 모임 장소에 비치하고, 연대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서 신문을 알립니다. 명함 뒷면에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소식을

읽습니다. SNS는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노동

자 연대〉는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노동

자 연대〉는 매우 중요한 매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노동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자 연대》는 웹사이트가 매우 훌륭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계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SNS를 잘 활용하면 〈소셜리스크 워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일부는 온라인 조회수가 십만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종이 신문 판매부수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를 멈춰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종이 신문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혁명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은 차단돼 있을 것입니다. 혁명가들이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올해 북아프리카 나라 수단에서 대규모 항쟁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5주 동안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혁명적 상황에는 왓츠앱 같은 SNS를 이용해 소통할 수 없을 것임을 대비해야 합니다.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그래프(자료3)에서 보듯 몇몇 나라에서는 뉴스 구독 목적의 SNS 사용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위 선은 브라질의 뉴스 구독 목적 SNS 활용도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브라질은 SNS 사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인데, 2015~2016년을 고비로 70퍼센트가 넘던 비율이 65퍼센트로 줄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유료 뉴스 구독 의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자료4) 눈에 띄는 것은, 특히 자신을 좌파라 밝힌 사람들 중에서는 2016년에는 15퍼센트만이 ‘유료 뉴스 구독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율이 29퍼센트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 매체가 진실을 전하는지를 우려하는 거죠.

놀랄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을 우파라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짜 뉴스’에 속든 말든 별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접하기 위해서라면 뉴스 구독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페이스북에서 뉴스 매체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자료5)

페이스북은 혁명가들이 노동계급에 주장을 쉽게 전파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SNS입니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두 번 바꿔, 뉴스 매체 웹사이트(〈소셜리스트 워커〉, 〈노동자 연대〉도 포함됩니다)로의 유입을 줄이고, 광고에 적합한 웹사이트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참 급격한 변화죠? 첫 번째 커다란 변곡점은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후 뉴스 매체 웹



앞시점2019에서 연설 중인 찰리 김버

사이트로의 유입이 급락합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에 알고리즘을 또 바꿨는데, 이 때도 유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 모두 〈소셜리스트 워커〉, 〈노동자 연대〉 같은 매체들은 도달률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 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혁명적] 언론들을 접할 기회가 훨씬 적어진 것입니다.

조직 건설 과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왜 우리가 SNS 시대에도 종이 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① 신문은 독자 · 판매자들이 스스로를 신문과 동일시하게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는 대체로 익명 속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신문을 들고 서서 판매를 하게 되면 — 한국에서는 어떻게 들고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이렇게 들고 판매하는데, 1면 전체가 잘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초심자들은 긴장한 나머지 반쯤 접어서 품고 있기도 합니다. [좌중 웃음] 어쨌든 용기를 낸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 판매하는 여러분이 노동자든 학생이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신문의 주장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신문과 동일시되는 모종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레닌은 사람들이 혁명적 신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는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이는 격렬한 계급투쟁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작업장 소식을 기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문을 구입하는 것으로,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는 신문을 사지는 않아도 신문에 후원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셋 모두가 매우 소중한 기여입니다.

② 신문은 다양한 쟁점들을 한데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영국에서 열린 홍콩 항쟁에 연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가해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홍콩 소식

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구입해 읽어 보세요’라고 말하며 신문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서 신문을 구입한 사람은, 홍콩 기사만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파업 소식, 보리스 존슨이 도입하려는 경찰력 강화 조치 같은 다른 기사들도 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쟁점 하나에 이끌려 신문을 산 사람도 〈소셜리스트 워커〉가 매호 18 · 19면에 현장 노동자 파업 · 투쟁 소식들을 다룬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기사 하나를 읽은 사람이 다른 기사를 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웹사이트 전체를 훑어보지는 않습니다. 종이 신문은 그 특성상 혁명적 정치를 총체적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③ 신문은 당원들과 그들의 주변 사람들 모두에 교육적 구실을 합니다.

신문을 팔려면 그 전에 신문을 읽어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 쟁점들의 성격, 노동계급 투쟁의 향후 과제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④ 혁명적 종이 신문은 신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SWP로 견인하는 구실을 합니다.

예컨대 〈소셜리스트 워커〉에는 한 주 동안 영국 각지에서 열릴 SWP 당원 모임 광고를 실어,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실어 — 〈노동자 연대〉에도 기본 입장이 실리는 것으로 압니다 —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혁명적 신문이 처음 탄생한] 1850년대나 볼셰비키가 활동하던 러시아 혁명기와는 매우 다른 시절입니다. 그러나 교육 · 조직 · 선동은 여전히 혁명가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SNS 시대’에도 종이 신문은 여전히 핵심으로 중요하고, 바라건대 레닌이 말한 신문의 과제였던 ‘전국적 무장 봉기 준비하기’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정리

발언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혁명적 신문이 지배계급의 추악한 진실을 들춰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독자 한 명이 영국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악 계획을 담은 문서를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부에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지면에 폭로했는데, 그 후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모두 저희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평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거짓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이 평판을 사수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파업을 승리한 것처럼 보도해서도 안 되고 1만 규모의 시위를 4만 명으로 부풀려서도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 줄 것입니다.

둘째, 주류 언론과 혁명적 신문의 차이점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 하나는, 혁명적 신문 구입은 양방향 소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리 매대나 상점에서 기성 신문을 구입한다고 신문사가 ‘저희 독자 모임에 나오시겠습니까?’, ‘이전에도 저희 신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단체 가입을 생각해 보셨나요?’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혁명적 신문을 구입하는 것은 사뭇 다른 행위입니다. 혁명적 신문 판매는 독자를 더 많은 정치 활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문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의 주류 신문들은 무가지로 배포하고 광고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일부 좌파들도 무가지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받습니 다. 우리 신문에 모종의 성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려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폐를 꺼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신문을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로 판매자와 모종의 유대를 갖게 됩니다.

호응

〈소셜리스트 워커〉가 선동 면에서 1850년대 〈북극성〉에 견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극성〉에 견주면 〈소셜리스트 워커〉는 명백히 부족합니다. 1839년 차티스트 운동 당시 〈북극성〉은 무장 봉기를 호소하거나 총파업을 호소해도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켰지만 〈소셜리스트 워커〉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셜리스트 워커〉도 그보다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규모로 치러질 수도 있었던 시위를 키울 수 있습니다. 파업에 연대를 조직해 투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 후 변화 문제가 노동계급 투쟁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해 일정 정도 호응

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혁명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 정치적 사상을 갖는 것뿐 아니라 — 세계를 변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적 신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러 동지들께서 신문으로 조직하는 법에 관해 발언하셨습니다. 저 역시 신문이 사람들을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 쟁점들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분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매주 30~50부를 판매한다고 하셔서 매우 놀랐습니 다. 제가 보기에 이는 정말 대단한 판매 부수입니다. 그런 동지들이 더 많이 있어서 작업장에서 독자 모임을 꾸린다면 더욱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소셜리스트 워커〉의 구호 중 하나는 ‘우리는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다’입니다. 지배자들이 재갈을 물리고 짓눌러 버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배계급의 사상에 부합하지 않아서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다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노동계급 운동에서 다루기 어려운 [인기 없는] 쟁점들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시류를 거슬러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아일랜드 독립투사들이 폭탄 테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전술이었고, 아일랜드 독립에 도움도 안 됐습니 다. 하지만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는, [테러의] 진정한 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의 아일랜드 지배라는 논조의 기사를 냈습니 다. 당원들은 그 신문을 들고 작업장에 가서 ‘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이 철수해야 한다’, ‘가장 큰 책임은 영국 제국주의에 있다’ 하는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최신 사례는, 지금 영국 노동 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가 이주민 · 난민들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리스트 워커〉의 구실은 이런 주장에 반대에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동조건 악화는 당신과 나란히 일하는 다른 나라 출신 동료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라 사장들과 사회 최상층 때문이다’, ‘이주민 통제 강화가 아니라 노동조합 강화가 필요하다’ 같은 주장을 말입니다.

사회주의 신문은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건설과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작업장 · 대학 · 지역사회에서 혁명 조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다음 번에 더 큰 투쟁이 분출했을 때를 대비해 혁명적 세력의 기반을 더한층 굳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지는 데 오늘의 혁명적 신문 논의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박종범 / 정리 김준호



칠레, 홍콩, 카탈루냐, 레바논 ...

세계적 위기는 세계적 반란을 촉진하고 있다

조셉 추나라

칠레: 건물이 불타는 가운데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오고 시위와 파업을 벌임. **에콰도르:** 시위를 피해 정부가 수도 밖으로 도망.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다섯 달째 격렬하게 충돌하는 중. **카탈루냐:** 독립을 주장한 정치인들을 투옥한 것에 항의한 총파업이 벌어짐.

레바논: 시위대가 총리를 몰아내고 바리케이드를 쌓음. **아이티:** 반정부 시위가 잇달아 벌어지더니 급기야는 경찰까지 거리에 나와 임금 체불에 항의. **이라크:** 시위대가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부패 혐의로 처벌하라고 요구. **기니:** 수십만 명이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러 행동에 나섬.

여기에 더해 이집트에서는 저항이 부활하고, 7월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정부 수반이 퇴진했으며, 그 전에는 알제리와 수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새로운 국제적 투쟁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 분명하다.

이 운동들이 서로 조율하며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결풀 벗기고 보면 이 저항들을 추동하는 공통된 장기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노동계급

우선 국제 노동계급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힘이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서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임노동으로 먹고산다. 최근 여러 투쟁에서 파업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파업이야말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준다.

최근 노르웨이 학자들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민주주의 투쟁들을 살펴보니, “산업 노동자들이 민주화의 핵심 주체”이며 운동의 힘과 응집력을 제공했더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런 연관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깊어졌고 사회가 도시화하면서 더 두드러졌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급 성장과 더불어 또 다른 추

세가 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하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줄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1970년대 후반 이래로 전반적으로 악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중국 등지에서 국지적인 호황이 있었지만 말이다.

2008~2009년 경제 위기로 거의 모든 곳에서 성장이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 “새로운 정상 상태”가 자리잡았다. 그 결과 사회 꼭대기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이 날카로워졌다.

최근 투쟁들은 거의 한결같이 불평 등에 분노를 표한다. 때로는 “부패”에 항의하기도 한다. 여기서 “부패”란 보통, 제 잇속만 차리는 극소수 특권층이 자기가 착취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경제 악화로 인해 정부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조건을 새로이 공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에콰도르의 반축 정책에 의해 촉발됐다. 레바논에서 그 불꽃은 왓츠앱 통화세 부과를 포함한 세금 인상 계획이었고, 칠레에서 그 불꽃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었다.

정부가 공격을 철회해도 보통 저항이 계속된다. 저항이 국가 탄압 때문에 정치화하고, 더 광범한 고통과 분노를 배경으로 지속된다.

이는 셋째 장기적 추세와 이어져 있다. 바로 대중과 주류 정치의 괴리다. 그 뿌리는 1980년대부터 주류의 [좌우를 망라한] 정치인들이 공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데에 있지만, 그 괴리 과정도 2008~2009년 위기 이후 더 빨라졌다.

이런 상황은 극우 정치인들에게 기회일 수 있다. 브라질에서 극우파인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대통령에 당선하고, 인도에서 극우파인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를 지내는 수혜를 입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런 괴리가 거대한 저항 운동을 낳고 좌파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투쟁들은 보여 준다.

여기서 사회주의 세력의 존재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라틴아메리카 투쟁을 자세히 보도했는데, 거기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평한다.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봄’이 왔는가 하고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정치적 주도력을 발휘할] ‘다음 타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사태는 좌절로 끝날 공산이 큼니다.”

다음 타자

최근 투쟁이 ‘아랍의 봄’과 다르다는 암시는 어긋난 데가 있다. 2011년 아랍 혁명에서도 급진 좌파가 너무 작고 뿌리가 얇았던 탓에 자본주의 국가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집트가 특히 그랬는데 전직 군 장성인 엘 시시가 권력을 잡고 저항을 분쇄해 버렸다.

그러나 전진을 위해서는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도 물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투쟁 물결이 결국 가라앉은 것은 당시 ‘타석에 들어선’ 이들이 모두 좌파 민족주의 인사였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그보다는 덜 급진적인 브라질 대통령 룰라 모두 당시 투쟁의 급진성을 반영했지만 동시에 그 급진성을 기성 국가에 통합하려 했다.

그들은 국제 원자재 시장 호황에서 얻은 수익으로 통치를 안정화할 수 있었다. 자본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빈민을 구제하는 복지 정책도 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원자재 호황은 끝났다. 에콰도르에서 반란은 코레아가 손수 지목한 후계자를 겨냥하고, 모랄레스도 저항에 직면해 있다.

현재 투쟁들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가 그 투쟁들 안에서 부상해, 자본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포용하려는 시도를 넘어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혁명적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9년 11월호 / 번역 이원웅

칠레의 노(老) 혁명가가 말한다

칠레 항쟁의 잠재력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이 글의 필자인 **마리오 나인**은 칠레의 혁명가이며, 1970년대 칠레의 혁명적 상황을 경험했고 피노체트 군부 독재에 의해 투옥되기도 했다.

칠레의 항쟁이 계속되면서 신자유주의, 어쩌면 자본주의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총파업이 거듭 벌어지고 대규모 거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29일 발파라이소(수도 산티아고 근처의 항구도시)에서 출발한 거대한 행진이 11월 2일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시위가 어찌나 크고 격렬했는지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가 이름높은 두 국제 회담을 취소한다고 했다.

하나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12월 초로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였다.

이전까지 피네라는 신자유주의의 성공 사례로 국제적으로 칭송받았다. 이제 피네라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상징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주 내내 칠레를 휩쓴 저항이 “외세의 입김” 탓이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 또한 피네라의 “질서 회복” 노력을 지지한다는 더 불길한 소리도 했다.

이번 항쟁은 외세가 아니라 칠레 사회 내부의 동학에서 비롯했다.

칠레 사회는 지극히 불평등하다. 2만 6000명이 영양실조, 의약품 부족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한 칠레 방송사가 최근 보도했다. 한 노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공공 병원의 여건은 19세기 영국을 방불케 한다고 한다. [환자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칠레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노동자, 실업자, 심지어 중간계급 일부까지 포괄하는 사회의 광범한 층이 시위에 공감한다.

오직 최상층 엘리트만이 시위대를 멸시한다.

시위를 촉발한 것은 교통 요금 인상이지만, 쟁점은 순식간에 교육·보건·빈부격차 등으로 번졌다.

지배계급은 심각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지배계급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다. 자유 시장이 기적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을 더는 옹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칠레 경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팽창했다. 지금은 그 팽창이 멈췄고 지배계급의 정당성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지배자들은 시위대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를 택했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0명,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군경에 살해당했다.

올해 칠레 곳곳에서 열린 “사자(死者)의 날”[중남미의 명절, 보통 죽은 친지나 친구를 기리며 명복을 빈다] 행사는 이번 시위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을 기렸다.

지도력

이 사회 운동에는 아직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세력이 없다.

전통적 좌파 정당들인 사회당과 공산당은 피네라 정권 이전의 “좌파” 정부에서 그들이 한 구실 때문에 이 운동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당들도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다.

사회당 소속 미첼 바첼레트가 집권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민영화에 반대해 거대한 저항을 일으켰다. 바첼레트 정권은 그 운동을 내쳤다.

2017년에 새로운 좌파 정치 연합 ‘광범전선’이 출범했다. 여기에는 급진 좌파, 녹색 정치, 자율주의 성향의 다양한 단체들이 결집했다. 그러나 광범전선 또한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하기보다는 선거에 매달리는 전략과 단절하지 못했다.

시위 현장에는 칠레 국기나 칠레 원주민 마푸체족의 깃발만이 나부끼고 있다. 주류 좌파 정당들의 깃발은 없다. 혁명적 조직이 매워야 할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 지배계급은 조야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이들의 선전은 사회주의를 반(反)민주적인 전체주의 체제로 묘사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은 거리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는 쓸모가 없다.

“국민적 대화”나 “민중의회”를 하자는 논의가 위로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저항에는 훨씬 큰 잠재력이 있다.

칠레의 저항은 이런저런 작은 개혁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혁명적 사회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싸움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679호 / 번역 이원웅



10월 28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모인 시위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이정원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체는 낮은 처우, 여전한 차별, 고용불안을 낳는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는 것이었다.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전환에서조차 제외됐다. (정부 집계로만 봐도 4분의 1만 전환)

더구나 공공부문에 도입한 사전심사 제도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만 냈다. 2018년 말 기준 6만 7000명이 새롭게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 확대되는 시간제·단기 저질 일자리

노인의 단기 일자리와 보건·사회서비스·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1년 사이 무려 44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이기는커녕 낮은 임금, 공짜 노동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다.

■ 민간 비정규직은 방치·방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등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사실상 기업주 편들기나 해 온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 판결보다 못한 시정명령을 내려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 최저임금 줬다 뺐기, 역대 최저 인상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산산조각났다. 최저임금 줬다 뺐기 계약으로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부는 또 한번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로 잇따른 산재 사망

고 김용균 씨의 비극적 죽음은 끔찍한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건설 현장, 조선소, 제철소, 고속도로, 철로, 우체국, 병원 등 곳곳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어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주화 금지와 정규직화는 뒷전이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생색이나 내더니 더 후퇴한 개악(산안법 하위법령)까지 추진하고 있다.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때와는 달리 고용이 안정적이고 처우가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용역회사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인력회사로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용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커다란 맹점이 있다. 적잖은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사정 변경예산 감소나 미확보,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때 자회사가 가장 쉬운 표적이 됐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금 도로공사가 요급 수납원들을 한 사코 자회사로 몰아넣는 것도 장차

수납 업무를 없애는 데 직접고용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쟁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자회사들도 있다.

경쟁채용도 고용불안을 낳는 요인이다. 최근 인천공항 사측은 이미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에게 “임시로 고용된 것이며 모두 경쟁채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 제약

임금과 처우는 노동부가 발표한 전환자 전체의 평균 인상율(16.3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신설 자회사의 경우 용역회사 때보다 관리비와 이윤 비중이 증가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모회사인 공공기관들이 용역회사 때보다 낮은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도 임금과 처우 개선을 제약한다. 정부도 수의계약 시 “동종·유사업종 대비 거래 가격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은 커다란 제약이

따르기 십상이다.

적잖은 자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의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사용자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근무형태를 바꾸면서 임금을 깎거나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심지어 인천공항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력이 감축됐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말도 완전 거짓말이었다. 원청은 여전히 고용과 노동자들의 처우 전반을 좌우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 한다. 자회사 노조들이 참가하는 원하청 협의회는 대부분 구성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만들어진 곳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더 심하게 제약되고 있다. 곳곳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이용해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가령,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KAC는 노동자들이 자회사 분할 저지와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려 하자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들이댔다. 파업 금지 인원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며 수개월간 발을 묶었고, 결국 높은 필수

유지업무 비율이 적용됐다.

이처럼 2년 만에 자회사의 폐해들이 선명히 드러나면서 자회사 중단과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온건한 노동계 인사들도 자회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되돌리는 위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점에서 노동운동내 일부가 애초 정부의 자회사 정책을 전면 반대하기보다 '좋은 자회사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안심하게 접근하며 자회사 수용의 문을 열어줬던 것은 문제다.

지금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동 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자회사 도입을 제한하고 기존 자회사들의 문제점을 개선(처우 개선,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자회사가 상당수 도입된 현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이 자회사 폐해에 맞서거나 지금도 자회사 수용을 반대하며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결하고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정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결과물은 정규직 제로였다.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결의대회

조민하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일이 벌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있다고 말하다.

하지만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은 정규직 양보로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기존 정규직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도 현실론 속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안에 동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몫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정부와 사측에 충분한 재원을 내놓으라며 싸우는 방법도 있다. 단결이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 사용자에게 양보를 얻어 낼 힘이 배가될 수 있다.

한편, 경제 위기 속에서 좁아진 취

업문을 어렵게 뚫은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반발한다.

하지만 채용 시험이 자격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을 겪으면서도 십수 년간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해 온 만큼, 이들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특혜가아니다.

사실 조국 논란에서 보듯 자본주의에서 공정성 논리는 위선이기 십상이다. 자신이 속한 계급과 부모의 경제 조건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므로 공정한 경쟁은 성립되지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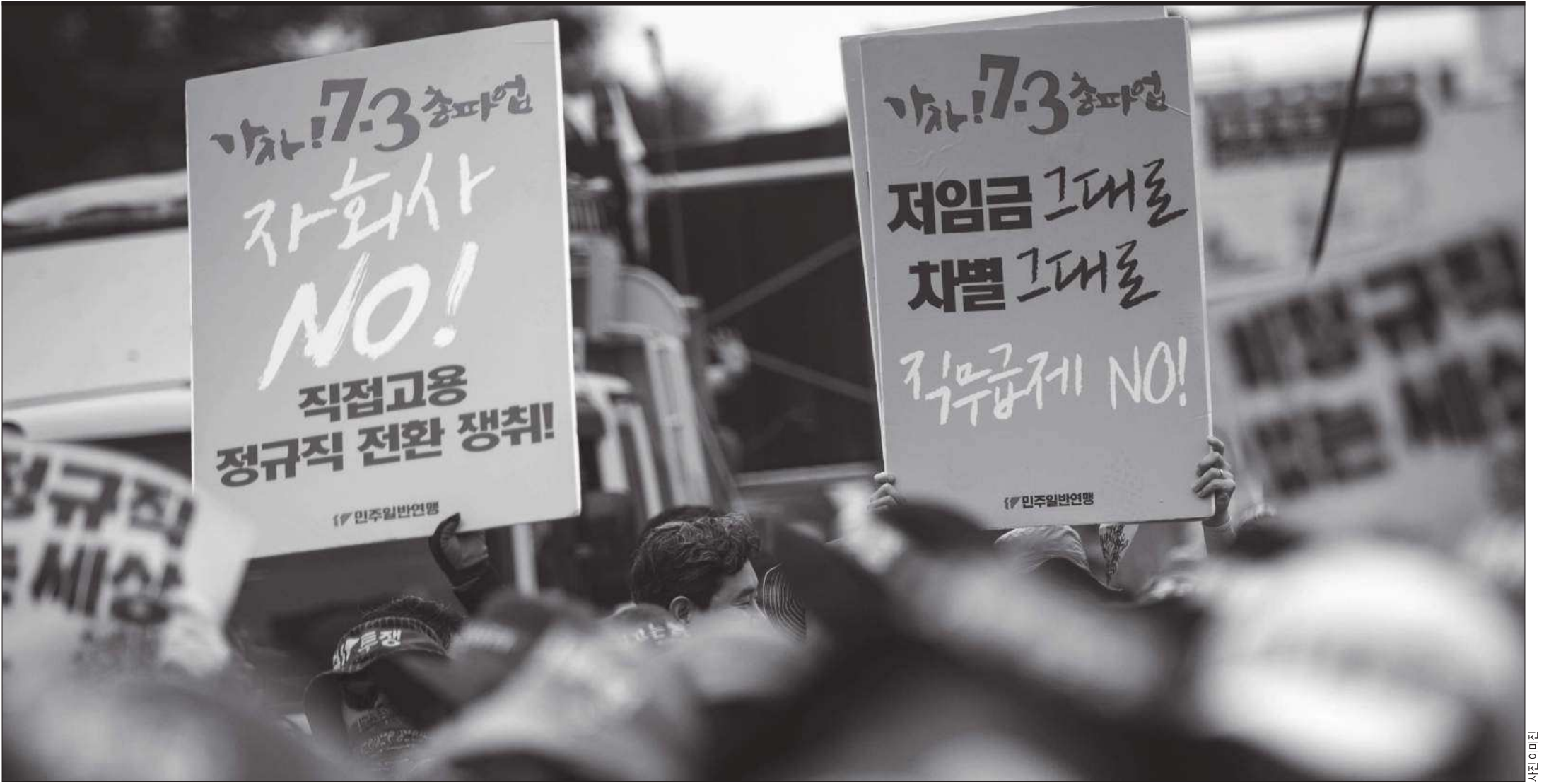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은 노동조합이 분열할까 봐 이러한 보

수적 견해에 타협했을 때 오히려 단결이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실제로 그간 정규직화에 반대한 일부 노조들의 조직력이 약화되거나 내홍에 시달렸다.

반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속에서 성과를 얻고 단결이 강화된 사례도 있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은 정규직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얻어 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문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 투사들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끌 것이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양효영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는 임금 차별 유지와 임금 억제를 위한 것이다 7월 3일 파업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말만 무성했던 우파 정부 시절에 비해 속도감 있는 직무급 추진을 보여 주는 일들이 지난 1년 새 벌어졌다.

은밀하게 속도 내는 직무급제 추진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수십 개 기관에 직무급제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체로 직무급제를 확대하려 한다. 지난 10월 2일 홍남기 부총리가 “20만 공무직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런 뜻이다.

둘째,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도 시나브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직무별 임금을 공시하겠다고 한다(임금분포 공시제). 직무 분류 기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임금을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손사래치지만, 직무 분류가 직무급제 설계의 첫 공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정규직 직무급제 추진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면서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이 모델은 지금까지 강원, 대구, 구미, 군산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들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직무급제

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된다는 것을 뜻한다.

임금 차별 정당화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가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임금체계라고 정당화한다. 정부가 원하는 바가 정말 그것이라면, 그동안 차별받은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 그리고 청년들의 초임을 대폭 올려 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으로 올리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도 ‘이제 그만’ 하겠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자 직무급제를 보면, 그것이 임금 차별 해소는커녕 해당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장기간 묶어 두려는 속셈임을 알 수 있다.

직무급제 하에서는 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직무가 낮게 평가되는 데다 상위 직무 등급에 오르기도 어려운 탓에,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처음부터 정부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돈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호봉제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 편입 시 급격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본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어쩌구는 진보 색칠용일 뿐이다. 사실 더 나아가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노동자들 처지에서는 속 터지고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임금에 고착될 판인데도 차별이 아니란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사무보조 직무의 가치가 낮으니, 당신들의 저임금은 직무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임금이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하라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차별) 해소는 외면하고, 애꿎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내의 임금 격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 일부에 도입된 무기계약직 전환자 직무급제(저임금 고착 효과)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이자, 연감생심 정규직 임금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후려치기

직무급제 도입이 임금 억제를 노린다는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의 직무급제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직무급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무급제 도입의 목표 하나는 현재 임금 체계의 연공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점은 이전 대통령들도 다 강조했으나, 그들 모두의 관심사는 사용자들의 임금 부담 증가를 줄여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본급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연구는 하락 폭이 15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직무급은 직무 등급 내 임금 상한선을 뒤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쉽다. 상위 직무 등급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것도 임금 상승을 어렵게 만든다. 오래 일해도 임금이 거의 제자리이기 십상인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의 또 다른 목표는 사용자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대기

업 정규직 임금을 후려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직무급제는 기존 자동차 노동자 임금의 반값 수준으로, 그런 구실을 잘 보여 준다.

〈조선일보〉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업계의 설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업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값 연봉과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임단협 등 기존 자동차회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저항에 나서야 한다

임금 억제 말고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더 있다. 직무급제는 유연한 전환배치에 도움이 되고(직무를 폭넓게 분류하는 경우), 관리자들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한다(직무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 반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 하기가 좀 더 쉽다.

또, 사용자들은 직무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의 임금을 정해서 매번 임금 협상(과 투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전환배치와 함께 현장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온건파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사용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직무급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직무급 임금체계에 그 자체로 임금 차별 해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처음 보장한 것은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이었다(제1차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체결한 조약).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조차 남녀 임금 격차가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분출한 노동자 파업과 동일임금 쟁취 투쟁 덕분이었다.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진 정부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과 여성에게 동일임금 주기를 어떻게든 피하려 할 것이다. 정규직 임금 억제에는 사활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동일임금 기치는 직무 가치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정규직·남성 임금 억제를 압박하는 명분일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 도입에 맞서 저항에 나서야 한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여성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그 힘을 투쟁에 사용할 때만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을 개선할 수 있다.

추천 소책자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2019)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와 노동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조목조목 파헤친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제시한다.

11.20 철도 파업 예고

악속 지키라니까 개악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

이정원

철도노조가 11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4조2교대 개편과 인력충원, 임금 인상, SRT-KTX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처우 개선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11~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 승인 없이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정규직 정의가 끝나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철도노조의 협의 요청도 거부하며 완강한 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공공기관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력 충원(에 따른 재원)은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SRT-KTX 통합에 전혀 의지가 없다. 최근 한 청와대 인사는 철도노조와의 만남에서 ‘임기 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해야 했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가 철도 통합 연구 용역을 중단시키며 통합 추진에 제동을 건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유체이탈식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단결권·파업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악, 온갖 규제 완화 등 친기업 노동 개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사용자들의 불평이 커지자 전임 보수 정당

들이 이행하지 못한 노동 개악 완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개선은커녕 개악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편(3조2교대→4조2교대)도 인력충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쥐어짜서 해결하려 한다.

업무가 많은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인력효율화”(전환배치)로 충원해야 할 인력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를 위해 변형 일근제, 야간격일제,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확대 등을 추진하려 한다. 또, 4조2교대 근무 대상자들에게 월 1회 추가 근무를 적용해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제한하려 한다.

사측의 개악안은 노동 강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 뻔하다. 철도는 지금도 인력 부족이 심해 공공기관 중 초과근로를 가장 많이 하는데다 산재 발생 1위다. 최근 밀양역 사고도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었다. 열차 운행 중에 하는 선로 작업은 안 그래도 위험한데 인력이 부족해 열차 감시원마저 규정대로 배치하지 않은 것이다.

교대제 개편은 이런 참사의 원인이 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함인데,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강도가 대폭 강화되면 이런 효과를 상쇄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4조2교대 시범 운영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인력충원 없는 교대제 개편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야간전담반 도입 등 추가 개악도 강행했다.

철도공사 사측은 노동시간 단축에



10월 1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출정식

다른 임금 보전도 못해 주겠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초과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에 부담 주는 투쟁”

임금 문제에서도 사측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다며 연차를 또 이월하고, 체불된 수당은 줄 수 없고 아예 수당을 깎자고 한다. 심지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개악해 통상임금을 줄이는 개악안도 내놔다. 직무급제 도입 시 노조 합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처럼 조건 개선은커녕 개악안 보따리만 풀어놓는 철도공사와 정부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은 철도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안전한 철도 운행도 담보할 수 없다.

사측의 개악안을 저지하고 요구를 성취하려면 만만찮은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철도노조가 정부에 부담을 줄 정도의 투쟁 결의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요구 쟁취는 녹록지 않다.”

지난 10월 1차 파업 때 9000여 명이 기재부 앞 집회에 모인 것은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열망과 철도노조의 막강한 조직력을 보여 줬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무력화 등 노동 개악을 밀어

붙여 불만이 커지고 있는 때에 정부에 도전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을 키우고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힘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단호하게 싸울 때 발휘될 수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착한 성장’, 불가능할까?
- ★ 민주주의 혁명 30주년, 그후 동유럽은 어디로?
- ★ 미대사관저 월남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 ★ 노동개악 정당화하는 4차산업혁명위 권고안
- ★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뺐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
- ★ 노동시간 연장에 맞선 프랑스 철도 비공인 파업
- ★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 또 깨다 등등

철도 자회사 비정규직도 함께 파업 돌입 예고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도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노동자들은 이미 한 차례 파업을 벌였지만 자회사 사측은 철도공사 핑계만 대고, 철도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뻔뻔스럽게도 철도공사 사측은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 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한사코 외면한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제자리고, 그조차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도공사는 자회사와 계약 시 낙찰률을 낮춰 노동자들을 계속 저임금으로 묶어 두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가 자회사에 대한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면 양쪽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철도공사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가 좀 더 어려워져 파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철도공사가 정규직 인력 충원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업무 외주화를 확대하려 하는데, 함께 싸워 외주화 확대를 막고 자회사의 처우도 개선하는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롭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경험은 단결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11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출정식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신정환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파산과 이에 대한 분노를 대변했다. 사고가 벌어진 전후사정이 알려지면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이윤 체제의 비정함도 드러났다.

사람들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보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산재 사망, 세월호 참사, 구의역 청년 노동자의 죽음 등을 떠올렸다. 그래서 지난 겨울 전국 각지에서 김용균 씨 사망을 애도하며 그의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사망 두 달여 만인 2월 5일 당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원 총원,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등을 약속했다.

8월 19일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정부가 약속한 진상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가 조사 결과와 함께 권고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 9월 28일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 비정규직 2차 상경 집회'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민영화·외주화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금지, 인력 총원,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노동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추가)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외주화 철회는커녕 민간기업(포스코, GS, SK 등)의 석탄 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도 없으면서 말이다.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노무비를 40퍼센트나 착복하고 있다.

발전소 최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 개발 사측은 정규직 전환 시 "기업 가치[가] 하락"된다고, 노·사·전문가 협의체 위원들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냈다.

발암물질이 가득한 작업 환경도 여전하다. 고작 마스크 하나 지급한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씨 죽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고 생색냈지만, 개정된 법은 발전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들을 외주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 공식 통계로만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동시에 적용된 사용자가 452명이고 사망사고가 난 회사만 157곳이나 되는데도, 실행이 선포된 경우는 단 한 명뿐이다. 기업에 대한 벌금은 평균 500만 원도 안 된다. 심지어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안법 시행령(안)을 더한층 후퇴시켜, 매우 제한적이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더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 재단 이사장)도 "1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만 된 채 합의 이행은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개탄했다.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김용균 씨 1주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년이 되도록 해결된 것 하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올해부터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노조가 사용자인 정부와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큰 기대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공무원노조는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보수위원회 실무협의회 참가를 중단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보수위원회를 둘러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초과근무를 해 온 소방공무원에게조차 예산이 없다며 수당을 주지 않았다. 약

덕기업주처럼 수당을 떼어먹은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장시간 노동하는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공무원들도 수당을 떼이긴 마찬가지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에 대처하면서 살처분, 방역조소와 상황실 근무 등을 하며 사고와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했다(2011년 구제역 때 9명 사망, 152명 상해). 그러나 장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1일 4시간 상한제' 때문에 시간당 만 원 꼴로 4시간분 수당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민간 부문의 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준해 적용할 것과 더 일해도 받지 못하는 '1일 4시간 상한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등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2022년까지 초과근무를 40퍼센트 감축하겠다고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설정했다(자기주도 근

무시간제). 하지만 총량 자체가 너무 적어 수당을 받지 않은 채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1인당 감독 사업장 수가 1043곳이나 되는데 초과근무 총량은 겨우 월 11시간 정도 배정돼 나머지 일하는 시간은 무상일 수밖에 없다.

'부당 수령'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보수위원회에서 노조와 대화하는 시늉만 할 뿐 노조의 요구 일체를 거부했다. 전문가 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조차 거부했다. 오히려 정부는 보수위원회 실무 협의 와중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일방으로 발주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도 논의하자고 한다. 심지어 정부는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에 대한 '부당수령'이 많다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복무 실태 점검과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일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있음에도 40여 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0년이 돼서야 받

기 시작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생계보조금 목적이었고 각급 기관은 정액 수당처럼 지급해왔다. 따라서 수당 삭감(또는 폐지)은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임금 삭감을 정당화하려 한다. 정당성을 따지려거든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지급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당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현실화하고 상시로 시간외근무가 많은 부문의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대화하자며 노조를 끌어들이고, '부당수령' 운운하며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제 자신들이 만든 대화 테이블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뒤늦긴 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보수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고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지금까지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작은 개선조차 얻기가 쉽지 않고 기존 조건을 지키려 해도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가 임금 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방안을 추진할 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한 마당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 대화 테이블은 이런 투쟁을 발목 잡는 구실을 해 왔고 그것이 정부가 노린 바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친기업·반노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법 개악(단결권과 파업권 공격)이 그 내용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금도 공무원 해직자들은 원직 복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디딤돌 삼아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모아 내고 정부에 맞선 투쟁 조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계약 비상!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박설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는 노동개혁(개약)”

재계와 보수 언론의 이런 주문은 문재인 정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지지를 구하려고 10월 초부터 친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약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던 재계의 요구에 적극 응답한 것이다.

지난 한 달여간 문재인인의 행보는 거침없다. 10월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 8일 국무회의, 17일 경제장관회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개약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월 10일과 15일에는 각각 삼성과 현대차를 찾아 재벌 총수들의 기업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데이터 3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월 11일에는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탄력근로제 개약안을 의결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약에 반대한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들을 해촉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교체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경사노위가 노동개약을 위한 ‘담정녀’ 기구일 뿐임을 재확인시켰다.

개약 3중세트 —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 공격

그리고 급기야 10월 21일,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집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노동계약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에서 노동계약 강행 처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지난 수개월간 다른 쟁점을 놓고는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스 지금 보여 줬다.

당면한 노동계약 법안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임금, 단결·행동권을 공격하는 것들이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것.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다.

• 최저임금 제도 이원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임금 인상 폭의 구간을 미리 설정하는 사전 단계를 만드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몬다.

• 노사관계법 개정: 노동기본권의 보장은커녕, 오히려 ILO 기본협약 기준을 빌미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자들의 저항권 제약이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개약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을 상징하는 대표 입법으로 꼽혀 온 것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노동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다.

발목 붙잡는 진영논리

그럼에도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계 대표 조직들을 정부 지지로 붙잡아 둘 수 있었다. 우파의 부상을 막으려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차악론이 노동운동 내에 퍼진 결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영논리는 우리 쪽의 저항 태세를 약화시켜 개약을 막는 데도 우파의 부상을 막는 데도 해악적이다. 최근 한 진보계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세 번 집권할 동안 노동권이 점차 후퇴하게 된 데에는 노동운동이 민주정부와 자신을 동일시했던 까닭도 있다.”

집권한 민주당은 늘 이전 우파 정부들이 실패한 노동개약을 마저 완수하는 구실을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밀어붙였고, 노무현 정부가 손배가 압류와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못다 한 각종 노동개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또다시 패스트트랙 문제 등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붙잡아 두고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자제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단호히 맞서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이나 강기정 발언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갈등 때문에 노동계약이 지연되길 바라면서 추후 총선 대응과 연결해 대응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세계적인 장기 경제 침체 때문에 노동계약

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의지는 굳건하다.

그 점에서 최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조하려는 쟁점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은 형식적인 접근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노동자 공격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확대라는 의회주의적 계산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투쟁의 타이밍

노동계약이 임박한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 10월 21일 여야의 노동계약 추진 합의 직후 노동운동 좌파단체 10곳이 신

속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해 민주노총의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촉구했다. 이것은 결코 성마른 투쟁 촉구가 아니었다. 여야가 예고했던 10월 31일 개약 처리가 약간 늦춰지고 있지 않느냐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효과적인 저지투쟁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국회에서 개약안 강행 처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다. 정부는 일찌감치 11월 개약 입법 완료를 못 박았다. 이에 제동을 걸려면 단호하고 과감하게 저항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

위 일정에만 촉각을 곤두세워서는 안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개약 때도 봤듯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동계약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수 있다. 형식적인 하루 파업이나 항의 집회에 그쳐서는 개약을 막기 어렵다.

지도부가 국회 일정 쫓기 식이면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단호하게 싸울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며 투쟁 태세를 갖추기 어렵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총파업을 명령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